

스테이블 코인 발행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당정협의회사 민주당·금융위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논의 오는 10일까지 정부안 공유 요청도 규제해소, 원화코인 필요성 공감대

당정이 1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컨소시엄은 은행이 51%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국회 정부위 간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반을 만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쟁점은 발행주체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 한국은행, 은행 측과 조율을 다 끝낸 것 같고 법안은 다 성안이 돼 있다”며 “국회 입법을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논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강 간사는 “12월10일까지 정부안을 달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공유하지 않으면 정부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당TF와 토론회까지 거칠 예정이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나는 질문에 “정부 측에 뼈대가 담긴 안을 줘야 우리가 논의할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안되고 있어서 빨리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

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 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이외에도 강 간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합병 문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문제,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의무 공개 매수, 단기 매매 차익 상환 의무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는 해킹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을 도입해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안정기금 설치법과 배드뱅크(새도약기금)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시간 끌면 피해는 국민에게” vs 野 “예산 대규모 삭감 필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day

與 “합의처리 설득 최선 다할 것”
野 “與 일방처리 수순 의구심 들어”
처리시한 막판까지 거센 신경전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여야 회동 시작 20분 만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양측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하루 전까지도 거센 신경전을 보였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협상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월30일) 저녁 8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해서 만나 예산안 증감액과 관련 부분을 협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약속했었는데, 저녁 회동이 어렵겠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고 무산됐다”면서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다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정부 측에서 구윤철 장관이 나타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가 30분 안에 올 수 있

다고 해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정하기 위해 다시 만나자고 했던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일방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 부총리의 불참석을 ‘고의적 태업’이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 같은 경우 여야 간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협

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짜인 계획대로 일방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후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구윤철 부총리까지 참석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비비, 농어민기본소득,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등에서 대규모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과도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예산을 협상의 불모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회에서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1500억원 등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 중 쟁점이 큰 법인세 모든 과표구간 1% 인상안과 금융·보험업 수익 1조 이상 기업에 대한 교육세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1% 부과안도 논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30일 11건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는데, 여야 간 최종 합의 결렬시 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선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세 인상도 국민의힘은 기업에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성장한 금융·보험업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수를 거둬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12·3 내란사태 1년’…李 대통령, 연말 국정초점 ‘내치’

내일 특별담화·외신 기자회견 예정
이달 내 청와대 이전 마무리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1년을 계기로 연말 국정 초점을 ‘내치’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내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의 막을 내리고,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3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별담화 ▲기자회견 ▲5부 요인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별담화에는 12·3 내란 사태를 평화롭게 극복해낸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특별담화는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라며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

란 극복 과정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 등 국제사회에 ‘다시 돌아온 민주 대한민국’을 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생방송되며,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명이 참석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오찬도 진행한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 및 극복을 기억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3일 대통

령 일정을 설명한 후 “(그날) 깜짝 이벤트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개봉(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외부 일정은 다 경호 엠바고되더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장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2025년은 청와대 이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연내 이전’은 이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시행된 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정상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yj@